

국내 코로나19 완치율 40% 넘어섰다

25일 0시 확진자 9137명 중 3730명 완치... 40.8%
높아진 치명률 1.38% '부담'... 고령자일수록 높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율이 40%를 넘어섰다. 올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지 65일 만이다.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9137명 중 완치해 격리에서 해제된 사람은 3730명이다. 완치율은 40.8%다.

완치율은 최근 2주간 완치한 확진자가 하루 100~400명씩 나오면서 가파르게 올라갔다. 2주 전인 지난 11일에는 3.71%였지만 15일에는 10.21%로 두 자릿수가 됐다.

이후 19일에는 22.73%, 22일에는 32.70%로 앞자리 수가 바뀌었고 다시 사흘 만에 40%를 넘겼다.

당분간 완치자는 계속해서 하루 수백명씩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지 한 달이 넘으면서 이들 대다수가 회복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대부분은 경증 환자라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자의 80%가 가볍게 앓고 지나간다고 발표했다.

완치자가 늘면서 격리 상태에서

치료를 받는 확진자는 줄어들고 있다. 치료 중인 확진자는 5281명이다.

단 사망자가 지속해서 늘어나면서 치명률이 높아지는 점은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국내 치명률은 이날 1일 0.4%대에 머물렀지만 지난 18일 1%를 기록했다. 이후에도 치명률은 조금씩 상승해 이날 1.38%가 됐다.

평균 치명률은 1%대지만 60세 이상 치명률은 5.25%다. 현재 60세 이상 확진자 수는 2171명, 사망자는 171명이다. 이 중에서도 80세 이상은 확진자의 13.55%가 사망해 연령별 치명률이 가장 높다.

전문가들은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고위험군에 적절한 의로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본다. 또 손씻

기, 기침예절, 사회적 거리두기 등 생활방역을 통한 예방을 강조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는 “환자 발생 추이를 봤을 때 완치와 사망이 모두 늘어날 시기가 됐다”며 “이중 치명률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의 환자에서 두드러지게 높아지므로 고위험군은 감염이 되지 않도록 외출을 자제하는 등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기 교수는 “이제는 입원하지 못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는 없다”며 “지금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현 상황을 고려해 개개인의 감염 예방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JDC, 4개월간 임원 급여 30% 기부 결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
직원 급여 지역상품권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제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JDC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원들은 급여의 일부를 기부하고 직원들은 급여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받는 내부 캠페인을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대림 이사장 등 상임임원들은 월 급여의 30%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4개월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일반 직원들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속속 밝히고 있다. 부서장들은 월 급여의 10%, 부서장 이하 직원들은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상품권을 구입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역상품권 사용은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되는 측면에서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경훈 JDC 사회가치추진실장은 “조그마한 관심으로 시작된 우리의 행동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 급여의 일정 부분으로 구매한 지역상품권을 활용해 지역시장과 동네 마트를 적극 이용하겠다”고 말했다.

문대림 JDC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일동은 “직원들의 자발적 움직임에 발맞춰 통 큰 기부 및 지역상품권 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발벗고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고대문 기자 bigroad@ihalla.com



코로나19 진단시약 문제인 대통령이 25일 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기업 중 하나인 씨젠에서 시약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 문 대통령에 진단시약 요청

24일 양국 정상 전화통화서 방역 물품 지원 언급
정은경 본부장 “국내 방역 지장 없는 선에서 가능”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한 의료장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시약’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25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요청받은

의료장비는 코로나19 진단시약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현재 5개 진단시약이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고, 현재 국내에서 2만 건 정도의 검사가 매일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

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의료장비 등 방역 물품 지원을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의료장비는 ‘진단 키트’라고 알려졌다.

정 본부장은 “국내방역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진단시약은 5개 회사가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면서 “국내 방역과 환자관리에 지장이 없는 생산량은 수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소형 마스크 더 쉽게 산다” 어린이용 주 3회로 공급 확대

정부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소형 마스크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주에는 소형마스크를 주 2회(수·토요일) 공급하고, 다음 주부터는 공급 횟수를 주 3회로 늘려 소형 마스크를 보다 쉽게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날 식약처는 소형 마스크 86만 4000장을 전국 1만6695개 약국에 공급했다.

식약처는 일선 약국에서 소형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소형 마스크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이날 약국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된 마스크는 총 1045만4000장에 달했다.

이 중에서 142만9000장은 오는 4월 6일 개학에 대비해 교육부에 소형 마스크 형태로 우선 배정했다.

구매 장소는 전국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이다.

한편 대리 구매 대상자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노인(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 노인), 어린이(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 어린이),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증상이자 등이다.

정부는 대리 구매를 할 수 있는 대상자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신광로터리~오일장간 교통체증 해소되나

도시계획도로 확장 3월 착공

교통체증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신제주 신광로터리와 오일장간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가 추진된다.

제주시는 도심지내 교통체증 해소와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광로터리에서 오일장간 연도로(대로1-1-1)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를 이달 중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예산 134억 원(공사비 41억 원, 보상비 93억 원)을 투입하여 신광로터리~오일장간 길이 1.31km(폭 8m) 구간에 기존 5차선을 6차선 도로로 확장하게 된다. 그동안 신광로터리에서 오일장 방향으로 1차로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체증으로 인한 통행에 불편을 겪어 왔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

지 사업비 93억 원(공사비 22억 원, 보상비 71억 원)을 투자하여 연장 580m 구간에 대한 도로확장을 완료했으나 나머지 구간은 완전개통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따라 이번 도시계획도로 확장에는 사업비 41억 원(공사비 19억 원, 보상비 22억 원)을 투자하여 미확장 구간 760m(폭 8m)에 대해 이달 내에 착공, 2021년 준공할 계획이다.

시는 신광로터리~오일장간 도로구조개선 등을 통해 지역주민 불편 해소와 교통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행자 안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윤형기자 yhle@ihalla.com

제주시, 2년 이내 미착공 건축허가 24건 직권취소

제주시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미착공 건축 24건에 대한 직권취소 결정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건축허가 직권취소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사실상 공사완료가 불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직권 취소 결정이 내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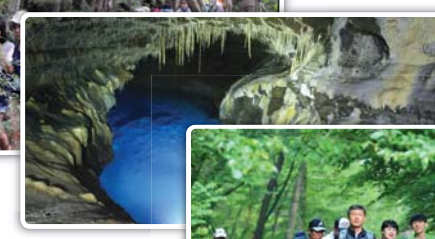
이번 직권취소 대상은 2018년 2월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후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주거용 19건, 비주거용 30건 등 모두 49건이다.

시는 이 가운데 미 착공건축허가 건에 대한 사전예고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착공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거용 11건, 비주거용 13건에 대해 직권취소를 했다. 이윤형기자



제주 환경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신원

한라일보 창간 31주년을 축하합니다.







한라기획
(주)카라반 제주총판, (주)대원레저 제주총판
몽골천막, 자바라, 각종 행사천막 제작·판매·대여
각종 행사, 단체식사 주문환영(특별저가배우전문)

대표 김 봉 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방매길 116 (아라1동)

종합이벤트

- 사무실 : 744-6688
- FAX : 749-8668
- H·P : 010-2623-6688
- jejuhanla@daum.net

